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 제재금은 부정이익의 8배, 신고포상금은 환수금액의 30%로 상향
- 온·오프라인 부정수급 제보 채널 개설
- 보조금관리위원회(기획처)에서 부정수급 여부, 제재 범위 등을 심의
- 보조금시스템을 전면개편해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 관리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6.3.1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6.3.10일(화) 15:00~15:40, 정부서울청사
(참석) 국무총리(주재), 기획처·재경부·과기부·교육부 등 40개 부처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 (①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②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③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④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⑤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상)을 점검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개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건(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24개팀, 440명 규모)’을 구성하여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②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보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 대폭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④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를 기획처 주도로 결정]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천만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⑤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현재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26년 중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논의된 대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위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의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책임자	단 장	임영진 (044-214-3370)
		담당자	서기관	정윤홍 (yoonhong@korea.kr)
	국무조정실 재정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박미경 (gabkyung@korea.kr)
		담당자	과 장	박해정 (044-200-2185)
			사무관	홍성표 (hsp0214@korea.kr)

